

정유기업, 초저유황 경유 도입 “부담”

수도권 조기도입 계획 흐지부지 ... 인센티브 요청에 정부부처 난색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는 초저유황 경유를 수도권에 조기 도입하려던 계획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월1일부터 수도권 경유의 유황 함유량을 30ppm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유업계에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면 막대한 시설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돼 현대Oil-Bank가 5월 충남 대산공장에 청정연료설비 기공식을 갖는 등 친환경형 연료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7월 초저유황 경유의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유기업들은 2003년에도 새로운 품질 기준에 맞는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시설투자 비용이 든다며 연료의 탈황 및 탈금속 촉매 등에 사용되는 환경오염방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의 감면 확대와 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정유업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도권에서만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현재 경유의 유황 함유량은 50-60ppm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권고대로 함유량을 더 낮추게 되면 추가 비용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화학저널 2004/06/08>